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다룬다. 2007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이들 가운데서도 노동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임금주도 성장론을 대안적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첫 번째 원고에서 Marc Lavoie와 Engelbert Stockhammer 교수는 임금주도 성장론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나아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들이 임금주도 경제체제와, 이윤주도 경제체제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친노동적 분배를 기조로 하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적절한 금융규제를 결합한 임금주도 성장론이 국제적인 공조의 기반하에서 성공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두 번째 원고인 Thorsten Schulten의 글은 국제적인 공조를 실행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유럽 차원에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최저임금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원고인 Juan M. Graña와 Damián Kennedy의 글은 임금주도 성장론의 관점에서 아르헨티나 경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재해석한 글이다. 국제노동브리프에서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해 왔지만, 남미국가인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소개하는 첫 번째 글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임금주도 성장론이 새로운 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apitalism)의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 성장모델과 다르지 않다. 이 이론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19세기의 맑스와 20세기의 케인즈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여러 경제사상가들이 제기했던 자본주의 경제의 근저에 있는 현상, 즉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본다면 생산한 모든 것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경제 전체는 임금주도 경제체제일 수밖에 없다. 비록 개별 나라들이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근린공핍화정책(beggar-thy-neighbour policy)을 모든 나라들이 지향할 경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는 나라들에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강요되는 재정긴축과 임금억제 정책, 자국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모습은 합리적인 조정기제를 갖지 못한 국제경제체제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실 국가경쟁력은 학문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려운 실체도 불분명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를 높이기 위한 모든 나라들의 '경쟁'의 귀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임금주도 성장론은 해답을 제시해 준다.

경제민주화가 올해 우리 나라에서 화두가 된 것처럼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임금주도 성장론이 주목하는 거시경제의 총수요체제를 넘어서 훨씬 더 복잡적이다. 당면한 문제가 복잡한 만큼 해법도 복잡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금주도 성장론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노동친화적 해법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번 호에 소개된 특집 원고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